

한반도는 트럼프의 도박장이 아니다

전쟁 위험 중단하라



북한 도발이
아니라 트럼프의
초강경이 문제다

8면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

2~3면

낙태죄 없애고
낙태 합법화하라

4~5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컬럼
출간 150년 맞은
《자본론》의
오늘날 의의

7면

‘4차 산업혁명’론과
기술결정론

5면

제국주의론 고전
부하린의
《제국주의와 세계경제》

7면

노동자 투쟁
철도 기관사 투쟁
현대중공업 원하청
노조 통합 추진

3, 6면



노동자연대 조직노동자 회원 회의에서 발제 하고 있는 필자

민주노총 임원선거 운동, 어떻게 되고 있나?

김하영 노동자연대 조직노동자운동팀장, 운영위원

민주노총 임원선거가 10월 말에 시작된다.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후보등록 기간이고, 11월 6일부터 29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이다(24일간). 투표일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다.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이 글은 이번 선거가 치러지는 조건과 좌파 측의 대응 전망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지만 후보군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 먼저, 좀 더 온건한 경향들에서 거론되는 후보부터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전국회의는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이나 윤택균 전 부산본부장, 최정명 기아차 비정규직(363일간 공공농성) 이자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로 세우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최정명 씨가 후보가 되면, '정치세력화'와 함께 비정규직 문제를 쟁점으로 부각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2)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다. 박유기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은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후보로 출마할 듯한다. 둘 사이의 공조도 점쳐지고 있다. 조상수 씨는 전태일을 따르는 노동운동연구소의 지지를 받는 인물로, 이번 선거에서 공공운수노조 중앙파와 사회진보연대의 지지도 받고 있다. 박유기 씨는 금속노조 중앙파다.

조상수 씨는 공공운수노조 좌파의 표를, 박유기 씨는 금속노조 좌파의 표를 잡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공조는 사회연대전략과 사회운동대안노조의 모호한 혼합물로서 정규직 양보론을 제시할 공산이 크다.

(3) 좌파 단체들은 본격적인 대응 논의에 아직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노동당이 민주노총 선거 공동 대응 논의를 두 차례 했고, 변혁당 등에 참가를 제안한 상태다. 그러나 좌파 공조 전망은 그다지 밝지 못하다.(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다룰 것이다.)

좌파 단체들은 각각 내부적으로 후보를 선정하거나 물색하는 과정에 있다. 노동전선은 이호동 공동대표가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로 정해질 가능성이 큰 듯하다. 그는 2002년 발전노조 위원장으로 파업을 이끈 바 있고, 공공연맹 위원장을 지낸 이후 오랫동안 전 해투 대표를 해 왔다. 변혁당과 노동당도 각각 후보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특정 인사가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다.

선거를 둘러싼 조건

이번 민주노총 임원선거는 문재인 정부 취임 초반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치러진다. 이번 선거를 둘러싼 상황의 특징들로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겠다.

첫째,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상당한 상황에서 치러진다. 물론 이미 사드 문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등을 놓고 불만이 꽤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 존중”을 표방한 문재인이 민주노총과 산하 산별연맹·노조들을 안정적인 대화 파트너로 삼을 것이라는 노조 고위 상근간부층의 기대가 크고, 현장조합원들도 이런 전망에 관심을 보일 것 같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는 그 토대가 허약해, 현장조합원들의 정서는 점차 왼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것은 지난 임원선거와 다른 조건이다. 지난 선거는 2014년 말에 치러졌는데, 그때는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2년가량 지나면서 노동자들이 정권 초기 좌절감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찾기 시작하고 있었다. 전교조의 정부 규약 시정명령 거부와 철도 파업 등이 중요한 계기였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스스로 투쟁에 나설 정도로 자신감이 높지는 않았어도, 지도부가 잘 싸워주기를 바라며 투쟁적·좌파적 지도

부를 선택할 가능성이 꽤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당시 노동자연대는 박근혜가 남은 임기 동안 고용률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내세우며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의 조건을 공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그래서 노동운동 내의 정규직 양보론과 정규직 ‘포기’론을 비판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을 강조했다. 마침, 선거운동 초반에 박근혜가 노동개혁안을 발표함으로써 한상균 선본의 주장은 큰 힘을 받았다.

둘째, 좌파 지도부에 대한 기대가 지난 선거처럼 모아지기에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지난 선거는 민주노총을 비교적 온건한 지도부들이 10년 넘게 이끈 뒤에 치러지는 선거였다. 이수호 집행부 이후로만 보더라도 국민파와 중앙파와 전국회의는 때로 독자적으로, 때로 연합해서 지도권을 잡았는데, 이 기간에 기업들과 정부의 공격에 제대로 맞서지 못했다. 이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누적됐다. 그런데도 국민파-중앙파-전국회의의 선본은 “준비 없는 투쟁 경계”론을 되뇌고 있었으므로 지도부를 투쟁적·좌파적으로 바꿔 보자는 주장이 호소력을 얻을 수 있었다.

물론 좌파 지도부의 재선 시도가 크게 기대를 불러일으킬 정도는 아니어도, 조합원들이 차선으로 생각하고 좌파를 다시 지지해 줄 수도 있고, 각 후보 진영이 어떻게 구성되느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이번 민주노총 임원선거는 처음 직선제로 치러졌던 지난 선거보다 관심이 덜할 수 있다. 직선제로 뽑혀도 상층 기구의 작동 메커니즘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조합원들이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다.

한상균 집행부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한상균 위원장은 2015년 4월 24일 하루 파업, 9월 23일 하루 파업, 11월 민중총궐기를 주도하고 구속·수감됐다.

이후에도 노동자 투쟁이 제한적인 수준에서 벌어졌다. 이것이 경제 회복 지연 같은 다른 불만들과 맞물리면서, 2016년 상반기 총선에서 박근혜가 패배했다.

이는 한편으로 집권당의 심각한 분열을 낳았고,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줘 여름과 가을에 갑을 오토택 투쟁,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투쟁, 철도 파업 등이 벌어졌다.

2016년 중반 이후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정세 주도력을 발휘하며 투쟁을 전개할 수도 있었지만, 전진의 기회는 민주노총의 기존 고위 상근간부층의 개혁주의라는 제약에 거듭 부딪혔다. 이것은 박근혜를 퇴진시킨 민중운동의 주도권과 성과를 민주당이 가져가도록 허용하는 효과를 냈다.

한상균 집행부의 임기를 돌아보면 여러 쟁점에서 동요하고 점점 더 우파 지도자들과 타협의 길로 나아갔음을 간파하기 어렵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아래와 같다.

(1) 공무원연금 투쟁은 초기 사례의 하나다. 한상균 선본은 노동개혁 저지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 저지를 당면한 투쟁으로 매우 강조했다. 그리고 좌파 선본으로서 국민대타협기구와 양보론을 비판했다. 그러나 한상균 집행부는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에 직면해 혼란과 동요를 보였고, 그 결과 사실상 양보론을 절반쯤 수용하는 무기력함을 드러냈다.

(2) 사회연대전략에 대한 타협적 태도는 취임 초 인사(人事)에서 이미 드러



2014년 선거유세 중인 한상균·이명주 후보

러나기도 했다. 한상균 선본은 세월호 투쟁 당시의 민주노총 지도부가 보인 무기력을 비판하면서, 민주노총이 사회·정치 투쟁을 주도하는 구실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비판의 대상이었던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의 민주노총 측 책임자 한석호 씨를 신임 사회연대위원장에 임명한 것이다. 이는 선본의 공약을 어긴 처사였고, 한석호 사회연대위원장은 임기 내내 정규직 양보론을 주장했다.

(3) 한상균 위원장은 2015년 11월에 총파업 하겠다고 약속했었지만 총궐기로 대체했다. 그는 총궐기를 통해 얻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총파업을 조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안타깝게도 총궐기 이후 자진출두해 구속·수감됐다.

(4) 한상균 집행부는 2016년 정세를 오판했다. 특히, 기이하게도 2016년 총선 이후 사기가 저하했다. 그래서 집권당의 분열 상황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 위원장의 구속·수감으로 지도부가 불안정에 빠진 어려운 조건이었지만, 객관적인 정세가 결코 어둡지 않았으므로 총선 이후 자신감 있게 투쟁을 건설할 수 있었다. 그러나 관료 기구 내부의 세력관계가 불리해졌다는 협소한 전망 속에서 이런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 점은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기 불과 몇 주 전에 있었던 한상균 위원장 사퇴 에피소드에서도 잘 드러났다.

(5)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한상균 위원장은 일자리위원회의 조기 참가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의 사례들을 봤을 때 한상균 집행부가 “언행일치 지도부”였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선거운동 당시 이영주 사무총장 후보의 구호가 “박근혜는 한 명도 구하지 못했지만, 전교조는 한 명도 버리지 않았다”였다는 것을 기억해 보면, 최근 전교조 중집의 비정규직 교·강사 정규직화 반대와 그에 대한 민주노총 집행부의 대응도 실망스럽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전교조 중집 입장 철회를 요구하지 않은 채, 비정규직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모순적인 연대 선언(전교조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동입장문)을 주선했을 뿐이다. 전교조 중집 입장은 사실상 ‘정규직 조합원만 버리지 않는다’는 것인데 말이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전기련)에 대해서는 노조가 아니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연대 호소에 응하지도 않았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의 확고한 편이 돼야 그들을 조직할 수 있고, 힘의 부족과 좌절을 경험한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시혜에 목 매달고 정부의 이간질에 이용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텐데 말이다.

물론 민주노총의 평균적인 조합원들의 눈으로 봤을 때 한상균 집행부가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지는 않을 것이다. 한상균 위원장은 대단한 투쟁을 일으키는 데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 정도만으로도 욕고를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좌파 지도부라서 뭔가 다르고 우파 지도부와는 선명히 구별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 주지는 못했다. 특히 전투적·좌파적 조합원들의 눈으로 봤을 때 더

그렇다.

한편 좌파는 지난번 선거 참여에 성공하면서 자긍심이 커진 것이 가장 큰 성과였을 것이다. 그러나 좌파가 좌파 노조 지도부와 동맹해 얻고자 했던 효과(즉, 현장 노동자들이 좌파 지도자가 지시하고 선언한 파업 투쟁에 안전감을 느끼면서 참가해 그 속에서 자신감이 회복되는 것) 면에서는 성과가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좌파 공조의 난점들

이번 선거가 치러지는 조건과 좌파 내부의 상황을 볼 때 좌파 공조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더 어려워졌다고 보인다. 아래에서 그 요인들을 살펴보자.

첫째, 이번 임원선거의 주요 쟁점 하나가 될 것임이 틀림없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태도와 대응 방향 문제는 좌파에게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닐 것이다. 문제가 될 것은 아마 말이나 정책이 아니라 실천의 모호함일 것이다. 과거의 경험을 보면, 일부 노동조합 좌파들은 ‘사회적 합의’ 문제에서 흔히 동의했다.

현재 중요한 쟁점 하나인 정규직 양보론에 대해 노동조합 좌파는 부정적인 의견을 퍼뜨리면서도, (정규직 조건 방어가 다소 내키지 않다 보니) 실천에서는 일관되지 않았다. 따라서 ‘격차 축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정규직 양보)’ 문제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시 보여 준 약점이 되풀이될 우려가 있다.

여기서 고려할 점이 한 가지 더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나 조직 통합을 지지하지 않거나 모호했던 사람이 좌파 측 후보가 돼 사회적 합의(‘격차 해소’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포장된)를 비판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게다가 자칫 어설픈게 주장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정규직 이기주의’로 보일 수도 있다.

둘째, 좌파로서는 재선을 노리는 것인 만큼 지난 집행부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그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내용에 좌파들이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안은커녕 한상균 집행부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공유하기도 쉽지 않을 수 있다. 또는 좌파 단체들 간에 비판의 기초가 서로 다를 수도 있다. 일부 단체는 회원들이 한상균 집행부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비판적 평가를 꺼릴 수 있다.

또, 혁명적 좌파가 한상균 집행부를 왼쪽에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 “선본 참여 단체들이 한상균 집행부를 뒷받침해 주지 못한 것이 문제”라며 혁명적 좌파에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좌파 치고는 부족했던 여러 점들이 단지 관료 기구 내 세력관계 상 불가피했다기보다 한상균 집행부의 적극적 선택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견해일 뿐이다.

셋째, 후보가 정말 중요한데, 현 시점에 필요한 정치적 지도력을 갖춘 후보로 단일화가 되기도 쉽지 않을 수 있다. 한상균 위원장은 비록 앞서 살펴본 정치적 약점이 있었다 해도, 조합원 대중의 눈으로 봤을 때

77일간의 공장점거 투쟁을 이끈 지도자였다. 이런 점에서 한상균 위원장은 투쟁적 지도부를 강조하는 당시 좌파 공조의 내용에 걸맞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에는 재선을 호소하는 처지인 만큼 좌파 후보는 한상균 집행부의 약점을 발전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면모를 갖추고 있어야 대중적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좌파 공조의 전망이 밝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좌파 공조는 그나마 지난 몇 주 동안 점점 악화돼 왔는데, 젠더 이분법적 페미니즘이 좌파를 분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당 내 일부가 ‘아재 정치 아웃’ 같은 구호로 분리 성향을 두드러지게 드러내고, 이것이 노동당 내부를 향하더니(이갑용 대표가 남성 정규직으로 당의 지향성에 맞는 후보가 아니라거나 허영구 대변인에 대한 백인위 문제 제기를 다시 꼬집어 내는 식으로), 뒤이어 노동당 여성위 등은 노동자연대에 낙인찍기 하는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노동당 노동위는 여성위를 의식하며 최근 노동자연대가 주도하는 연대 활동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노동위 전국운영위)했다.

변혁당은 심지어 <노동자 연대> 신문 기자가 쓴 책의 폐기를 요구하는 서명을 하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노동자연대 추방 시도에 동참하더니, 급기야 <변혁정치>에 ‘노동자연대에 요구한다’는 글을 실어 노동자연대를 ‘성폭력 2차가해 단체’라고 비난했다. 이런 행동은 좌파 선거공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것은 좌파 공조를 안 하겠다는 선언이자 노동자연대가 포함된 선본을 바깥에서 비난하겠다는 선전포고인 셈이다.

사실, 변혁당은 좌파 공조에 별 관심이 없고, 공조보다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활동을 중시해 왔다. 특히, 갖가지 문제에서 우리 단체와의 연대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 왔는데, 우리가 그 단체를 중간주의(혁명적 노선과 개혁주의적 노선 사이에서 지그재그로 중요하는 경향을 일컫는 말)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발일 수도 있다. 심지어 단지 사소한 전술적 이견이 그 사유가 되기도 했다.

이번에도 노동자연대는 임원선거 좌파 공조를 변혁당에도 제안하는 것을 환영하는 입장이었는데, 변혁당은 노동자연대를 ‘성폭력 2차가해 단체’라고 비난하는 것으로 답변한 셈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좌파 선거 공조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번 한상균 선본에서 후보들과 참가 단체들은 시간을 끌면서 입장 표명을 미루고 노동자연대의 선본 지지 활동이 지속되도록 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좌파들의 분열상 때문에 이미 그 지행이 지난번과 다르다.

종합을 해 보자면, 혁명적 좌파가 노동조합 좌파 지도자와 제휴한다면 그것은 현장 노동자들의 자력 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개혁주의의 공간이 약간 열려 민주노총 고위 상근간부층이 조합원들을 실망시키기 좋은 시기이다. 이럴 때일수록 혁명적 좌파는 노동조합 좌파 지도자와의 제휴 목적과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그것을 갖대로 판단해야 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평창올림픽 수송 대비 시운전 열차 추돌 사고

기관사들이 항의 투쟁을 예고하다

9월 13일 경의중앙선에서 시험 운전 중이던 열차 두 대가 추돌해 기관사 한 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당했다.(본지 9월 15일치 기사 ‘경의중앙선 기관사 참사 사고: 기관사 목숨을 담보로 무책임한 시운전 강행한 책임자를 처벌하라!’를 참고하십시오.)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촉박한 개통 시기에 맞춰 무리하게 시험 운전을 강행하던 중, 신호 시스템 오류로 일어난 참사다. 자동 정지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두 기관차가 추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험 운전이 강행됐다.

철도노조는 9월 18일 운전지부(기관사들의 지부) 확대간부회의를 열었다. 지부장뿐 아니라 지부 임원들까지 모이는 자리였다. 철도노조에는 운전지부가 20여 개 있는데, 이날 확대간부회의에는 100명이 넘게 모였다. 연차를 쓰고 휴일을 반납하며 모였다. 이번 사고에 대한 기관사들의 분노가 상당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노동자들은 “기관사가 마루타인가? 추돌 안전 테스트의 마네킨인가?” 하며 기관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무리한 시험 운전에는 울분을 토했다. 또한, “사고로 사람이 죽어도 공사에서는 책임지는 놈 하나 없다”며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성토했다.

기관사들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하고, 철도공사와 정부가 사고 책임을 기관사 개인에게 전가해 온 관행을 이번만큼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기관사의 부인도 같은 바람을 표했다. 그도 열차 승무원으로 일하는 철도노조 조합원이다. 남편을 잃은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그는 동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위험한 근로환경들이 저희 남편의 죽음을 기점으로 단절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시스템 오류

이번 사고와 같은 시스템 오류가 실제 여객열차 운행 중에 일어난다면, 기관사는 물론이고 승객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대형 참사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철도 기관사들은 9월 25일 오전 4시부터 “고강도 안전운행 투쟁”(감속 운행)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노동자들은 책임자 처벌, 사고 원인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신호 시스템은 이미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 시스템을 노사 공동으로 일제 점검하자고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시험 운전 시행을 위한 노사합의 절차를 마련하자고도 했다.

이번 투쟁을 위해 각 지부는 9월 19일부터 지부 총회를 열어 감속 운행 투쟁을 위한 결의를 모아 가고 있다.

기관사들이 감속 운행을 하면 전동차와 KTX 등 열차 운행 전반이 지연될 것이다. 철도공사와 보수 언론은 승객 불편 운운하면서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을 비난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더 큰 참사를 막기 위한, 노동자와 승객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투쟁이다. 기관사들의 감속 운행 투쟁은 정당하다.



독일 사회주의자에게 듣는 총선 전망

극우의 의회 입성을 경계한다

9월 24일 독일에서 총선이 열린다. 현 여당인 중도우파 기민당(CDU)이 1위를 차지해 총리 앙겔라 메르켈이 총리직을 계속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독일 경제가 그리 나쁜 상태가 아닌 것의 반영일 듯하다.

그러나 경계심을 가지고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인종차별적 우익 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당(AfD)의 성장이다. 독일을위한대안당은 현재 지지율이 3위이다. 실제 투표 결과가 어떨지는 모르지만 의석 확보 최저선인 5퍼센트는 확실히 넘길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사회주의 단체 ‘마르크스21’의 활동가 프랑크 령켄은 “나는 이제는 독일을위한대안당을 파시스트 정당으로 본다”며 “60여 년 만인 파시스트의 의회 입성을 매우 우려한다”고 전했다.

파시스트들이 포함돼 있었지만 당 자체는 우익 포퓰리즘 정당이었던 독일을위한대안당이, 올해 초 위기와 내분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당내 파시스트들이 득세하게 됐다는 것이다.

령켄은 “언론과 주류정당들이 계속 인종차별을 부추기고 있어서” 독일을위한대안당이 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도좌파인 사민당은 계속되는 지지율 하락에 고전하고 있다. 사민당은 2013년부터 기민당 주도의 연립정부에 포함돼 있었고, 그 때문에 정부의 친기업 정책을 비판하기를 꺼렸다.

이제 사민당은 여러 개혁 정책을 주



사진 출처: Resende Tysker(플리커)

“G20이 아니라 난민을 환영한다” 좌파가 인종차별에 원칙 있게 대응할 때 극우의 성장에 제대로 맞설 수 있다. 올해 7월 독일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 반대 시위대

장하고 있지만, 독일 노동자들은 그리 신뢰하지 않는다.

급진좌파 정당인 좌파당(디링케)은 그럭저럭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좌파당은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경제적 요구를 잘 제기하고 있고, 운동이 있는 지역에서는 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7월 독일의 2대 도시 함부르크에서는 G20 정상회담 반대 시

위가 꽤 크게 일어났는데, 이런 지역에서는 당원도 늘고 지지율도 오르고 있다. 령켄은 이렇게 전했다. “함부르크에서 좌파당의 지지율은 11퍼센트이다. 이는 놀라운 성장이다. 1990년대 좌파당의 전신 격이었던 정당은 이 지역에서 1퍼센트도 득표하지 못했다.”

그러나 큰 약점도 있다. “옛 동독 지역에서 좌파당은 지방정부에 포함돼

있는데, 지지율이 줄며 우파에게 지지 기반을 뺏기고 있다.” 또, “좌파당의 일부만이 무슬림 혐오 등 인종차별에 대처할 태세가 돼 있다.” 특히 지도부의 일부는 난민 문제 등에서 우파와 다를 바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독일을위한대안당이 성장하는 지금, 이 문제는 시급히 교정돼야 한다.

령켄은 “그래도 상황이 어둡지만은

않다”고 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메르켈, 인종차별, 극우에 맞선 운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독일을위한대안당이 공개 부스를 차리지도 못한다.”

령켄이 전하듯이, 독일의 “좌파와 반파시즘 활동가들 앞에는 만만찮은 과제가 놓여 있다.”

차승일

현대중공업지부의 원·하청 노조 통합 추진

현대중공업지부가 노조 규정·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금속노조 가입과 올해 현대중공업 기업 분할로 노조 조직 체계를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분할된 기업들에 지회·분회를 두고, 지단장(대의원 대표 격)을 직선으로 선출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특히 이번 규정안에는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일반직(사무직) 노동자들을 지부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별도의 지회로 돼 있는 사내하청지회와 일반직지회를 현대중공업지부로 통합해 단일한 노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미조직 노동자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조직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해 나갈 구상도 담았다.

조선업의 여느 사업장들이 그러하듯이, 현대중공업에도 정규직의 2~3곱절에 이르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조직화돼 있지 않고, 대량 해고, 임금 삭감 등의 구조조정 공격에 속수무책인 경우가 다반사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중대재해 위험도 크다.

현대중공업지부가 이런 노동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려는 것은 옳바르다. 상대적으로 잘 조직된 정규직 노조가 안정적인 “우산”

을 제공하면, 고용 불안 속에 위축돼 있는 하청 노동자들이 좀 더 용기를 내 저항에 나서기 수월해질 것이다.

사내하청 비중이 높은 조선업에서는 원하청 단결이 투쟁의 전진에 꼭 필요한 과제다. 단적으로 정규직이 파업해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을 하면 파업 효과가 반감된다. 적잖은 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몇 년간의 투쟁 속에서 이런 점을 실감했다고 말한다.

사내하청지회와 일반직지회도 노조 통합을 지지하며 반기고 있다.

잠재력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파 대의원들이 최근 연달아 열린 두 차례 대의원대회에서 규정안을 반대했다. 아쉽게 단 몇 표 차이로 규정안이 부결됐다.

우파 대의원들은 “조합원들에게 피해는 없는가?”,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과 동일임금 요구에 대안이 있는가?” 하고 묻는다. 마치 자기들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익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도 되는 양 우파들의 익숙한 레퍼토리를 꺼내 든다.

그러나 원하청 노조 통합은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해롭기는커녕 커다란 이익이다. 수많은 비정규직의 존재는 정규직의 임금·노동조건을 낮추는 압박 수단이 되고 있다. 사측은 지금도

해고와 임금 삭감 등에 신음하는 사내하청의 조건을 들어 ‘정규직도 잘리지 않으려면 희생을 감내하라’ 하고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을 지키고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원하청 노동자 모두에게 이롭다. 이를 위해서는 원하청이 단일한 노조로 뭉쳐 투쟁하면서 사측의 이간질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우파들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거추장스러운 짐짝 취급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투쟁 잠재력을 우습게 봐선 안 된다. 정규직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싸울 때, 구조조정에 맞선 저항에도 커다란 힘이 될 수 있고 조직도 더 확대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현대중공업 내 자민통경향의 현장 모임인 ‘우리함께’가 규정 개정안에 반대하며 사실상 우파들을 거둬고 나선 것은 유감이다.

조만간 있을 대의원대회에서 규정·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노조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노조로 조직해 단결을 꾀해야 한다. 활동가들은 기층에서 조합원들의 지지를 모아 내며 우파의 반대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박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노동자연대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 대중의 삶을 희생시키는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이와는 다른 세계를 추구하는 노동자 운동 단체입니다.

노동자연대는 다른 세상을 만들 힘은 노동자 계급과 파업대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있다고 믿으며, 노동자 투쟁에 참여하고, 연대를 건설하고, 투쟁 승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자·학생·청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울산, 강원충북 등에 지회들이 있습니다. 전교조·공무원·금속·건설 등에 노동자 모임이 있으며, 더 많은 부문에서 노동자 모임을 만들려 합니다.

이름

이메일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중고등학교 | ☐ 기타)

[선택] 휴대전화번호

회비/약정액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 기타 () 원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www.workerssolidarity.org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부하린의 《제국주의와 세계경제》

“전쟁과 무기 없는 자본주의는 상상할 수 없다”

김영익

니콜라이 부하린(사진, 1888~1938)은 러시아 볼셰비키의 지도자이자 이론가였다. 그는 제정 러시아의 탄압을 견디며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운동에 기여했다.

1920년대 그는 부적절하게도 스탈린에 앞서 일국사회주의를 주장했다. 그러나 스탈린은 1938년 날조된 혐의를 뒤집어 씌워 부하린을 처형해 버렸다.

제1차 세계 대전이 한창이던 1915~1916년, 부하린은 제국주의에 관한 중요한 분석을 담은 책 《제국주의와 세계경제》를 썼다. 레닌은 직접 쓴 이 책의 서문에서, 부하린의 저작이 제국주의의 경제적 토대와 그 사회적·정치적 영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했다.

레닌과 마찬가지로, 부하린도 당시 독일 사회민주당의 지도자였던 카를 카우츠키의 초제국주의론을 강하게 비판했다.(레닌은 카우츠키의 초제국주의론이 자본주의의 불균등 발전을 무시한다고 비판했다. 관련 기사 ‘레닌의 《제국주의론》: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최신 단계다’)

카우츠키는 제국주의를 체제가 아니라 주요 정부들이 취하는 정책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었다. 그는 세계경제가 통합될수록 이것이 정치에도 반영돼 강대국들 간 지정학적 갈등이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제1차세계대전은 자본주의의 정상 상태를 잠시 벗어난 일탈일 뿐이었다.

그래서 카우츠키는 사회민주주의(개혁주의)가 자본주의 질서의 ‘밝은’ 면을 그대로 둔 채 제국주의라는 “어둠”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늘날에도 이 주장은 여러 변형된 형태로 좌파들 내에 존재한다.

국가화와 국제화

레닌과 부하린은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돌발적 변화, 파국적 격변, 갈등으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하며, 초제국주의론이 시사하는 자본주의적 ‘평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봤다.

부하린은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의 서로 모순된 두 경향, 즉 국제화(세계화)와 국가화(국가자본주의)의 결합에서 비롯한다고 설명했다.

자본의 ‘국가화’ 경향은 자본의 집적과 집중의 결과다. 기업들은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끊임없이 이윤을 재투자해야 한다(집적). 그리고 (특히 경제위기 때) 강한 자본이 더 약한 자본을 흡수한다(집중). 이 때문에 갈수록 경제력이 소수 자본에 집중된다. 이 과정에서 국민국가와 대기업들 간 통합이 증대해, 국가자본주의가 출현한다.

그러나 이 과정은 생선이 갈수록 국제화하는 맥락에서 일어난다(자본의 ‘국제화’ 경향). 이 또한 자본의 집적과 집중에서 비롯한 것이다. 대기업들의 이윤 욕구는 국내 시장 안에



서만 충족될 수 없다. 그래서 자본들은 점점 더 세계적 수준으로 활동하고, 자본가들의 경제적 경쟁이 점점 더 국제화된다.

자본주의가 국경 밖으로 뻗어 나가고, 각국 안에서는 경제력 집중으로 대기업과 국가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의 경쟁 형태가 바뀐다.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대기업들은 다른 국가 기업들과 경쟁할 때 우위를 차지하려고 자국의 외교력·군사력에 의지하게 되고, 국가도 국익의 이름으로 자국 기업들을 정치적·군사적으로 지원한다. 따라서 자본주의에서 경쟁은 자본들 간의 경제적 경쟁만이 아니라 국가들의 군사적·영토적 경쟁의 형태로 띠게 되는 것이다.

이제 세계는 국가와 거대 자본이 통합된 “국가자본주의 트러스트”들이 서로 경쟁하는 무대가 된다. 그리고 이 경쟁의 승패는 “서로 싸우는 자본가들의 ‘국민국적 집단들’이 동원할 수 있는 군사적 힘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부하린은 제국주의 하에서 자본주의의 주된 모순은 경제 위기가 아니라 정치·군사적 경쟁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봤다. 즉, 국가자본주의가 일국 내에서 경제를 조직해 경제 위기를 낳는 경향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자본의 국가화와 국제화 경향을 포착했으면서도 분석상에서 주로 전자를 강조하는 약점이 부하린에게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훗날 그가 일국 사회주의론으로 나아가는 이론적 뒷받침 역할을 했다.

한편, 부하린은 이렇게도 지적했다. “전쟁 없는 자본주의를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무기 없는 자본주의 사회도 상상할 수 없다. … 무기의 존재가 전쟁의 주요 원인이나 동력이 아니라(물론 무기 없이는 전쟁할 수 없지만), 반대로 경제적 갈등의 불가피성이 무기의 존재 조건이다. 이 때문에 경제적 갈등이 이례적으로 격렬해진 우리 시대에 미친 듯한 군비 경쟁이 벌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제1차세계대전, 제2차세계대전과 같은 제국주의 국가 간 전쟁은 상호 경쟁하는 자본들이 지배하는 세계경제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전

세계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핵무기 경쟁 같은 광기 어린 군비 경쟁이 벌어진 까닭이었다.

오늘날의 동아시아

부하린의 제국주의론은 오늘날의 제국주의, 특히 동아시아 제국주의 갈등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통찰을 준다.

동아시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화 속에 경제가 크게 성장한 지역이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각국 경제들의 상호 의존이 크게 증대됐다. 그런데 그 결과, 언뜻 보기에는 모순되게도 전통적 영토 분쟁을 비롯해 국가 간 지정학적 갈등이 격화했다. 게다가 세계 1·2·3위 경제 대국들이 모두 연루돼 있다.

경제의 상호 의존 증대는 경제적 경쟁을 강화한다. 그리고 기업들은 자국의 힘에 기대려 한다. 예컨대 중국 기업들은 마오쩌둥 시절과 달리 세계시장에 상품을 수출하고, 그것에 필요한 원료도 세계 곳곳에서 수입한다. 중국 기업들이 세계화할수록 중국 국가가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리적 범위도 확장돼야 했다. 그래야 중국 국가가 자국 기업의 이윤과 투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군사력 강화는 기존 패권 국가인 미국의 영향력을 갉아먹는 일이다. 세계경제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한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잃는 것은, 미국 지배자들에게는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다.

이처럼 강대국들의 국익 충돌이 오늘날 동아시아에서 군사주의가 발전하고 불안정이 증대하는 주된 원인이다.

분명 100년 전의 자본주의와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다르다. 그러나 부하린이 지적한 자본주의의 핵심 특징은 본질적으로 같다. 자본주의 국가들이 서로 끊임없이 갈등하고, 궁극적으로 전쟁으로까지 나아가는 근본 동력이 바로 경쟁적 축적의 논리임을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오늘날 한반도 긴장을 이해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데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매우 아쉽게도 한국에는 《제국주의와 세계경제》의 판권은 번역본이 없다. 이른 시일 안에 이 책이 제대로 번역돼 국내 독자들에게 소개되길 바란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출간 150년 맞은 《자본론》, 그 어느 때보다 유효하다

1867년 9월 14일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론》 1권이 독일 함부르크에서 출판됐다. 마르크스는 직접 출판업자에게 원고를 가져다 준 후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껏 부르주아들의 머리 위로 떨어진 어떤 미사일보다 이 책의 위력이 더 클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류 학계는 한결같이 《자본론》을 사산아 취급한다(조너선 스퍼버와 개럿 스테드먼-존스가 최근 각각 발표한 마르크스 전기가 그 좋은 예다). 출판 당시에조차 시대에 뒤떨어진 책이었으니, 21세기에는 말할 것도 없다는 식이다.

이런 관점으로는 오늘날 《자본론》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전 세계에서 《자본론》 출간 150년 기념 학술대회가 열리고 있다. 나는 지난달 브라질에서 열린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했고, 이번 주에 [영국]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가 후원해 열리는 또 다른 기념 학술대회를 함께 조직하고 있다. 이 대회의 참가자 중 한 명인 데이비드 하비가 유튜브에 게시하는 《자본론》 강의가 공전의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보면,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비판을 이해하고자 하는 요즘 사람들의 열의를 읽을 수 있다.

9월 14일은 《자본론》 1권이 출간된 날이기도 하지만, 10년 전 노던록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로 파산하고 국유화된 영국 은행] 지점 앞에 예금주들이 늘어서 대량 인출 사태를 빚은 날이기도 하다. 영국에서 대량 인출 사태가 벌어진 것은 마르크스 생전이던 1866년에 [런던 소재 할인은행] 오버엔드저니언 컴퍼니가 무너진 이후 최초의 일이었다.

노던록 대량 인출 사태는 세계 경제·금융 공황이 백일하에 드러난 사건이었다. 세계경제는 지금까지도 그 위기의 여파 속에 있다. 자본가 집단이 혼란에 짓눌려 있다는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나 영란은행 같은 각국 중앙은행이 당시 금융 위기 이래로 푹 떨어진 금리를 [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올릴지 말지 우물쭈물하는 것만 봐도 분명히 알 수 있다.

《자본론》은 이런 혼란을 떨칠 수 있게 해 준다.(마르크스가 출간한 1권뿐 아니라 마르크스 사후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편찬한 2권과 3권도 마찬가지다.) 특히 《자본론》 1권은 마르크스의 역작이다. 엥겔스가 끈질기게 채근하지 않았더라면 《자본론》 1권은 빛을 보지 못했을 수 있지만, 마르크스가 친구[엥겔스]에게 말했듯, 그는 《자본론》을 “예술적 총체”로 만들려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자본론》의 몇몇 부분은 난해하다.(엥겔스가 마르크스에게 더 쉽게 쓰라고 다시 쓰게 한 1장이 특히 그렇다.) 그러나 하비의 강연이나 조셉 추나라의 최근 역작인 《마르크스의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자본론』 읽기 가이드』 같은 좋은 해설의 도움을 받으면 길을 잃지 않고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독창성

19세기 영국 평론가 W H 도슨의 다음과 같은 비평은 여전히 진실이다.(에릭 홉스봄이 지적했듯, 도슨의 평가는 요즘의 친자본주의 평론가들과는 논조가 사뭇 다르다.) “《자본론》의 교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책장을 넘길 때마다 펼쳐지는 발군의 독창성, 보기 드문 직관, 정연한 주장, 예리한 논조에 감히 반론을 펼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마르크스는 학술 연구자나 교수직위 같은 안락한 처지에서 이 책을 쓴 것도 아니었다. 마르크스가 경제학 연구에서 주요한 성취를 이룬 1850~60년대 내내 마르크스 가족은 빈곤에 시달렸다. 상황은 때로 심각하게 절망적이었다.

더구나 마르크스는 생애를 통틀어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 활동을 벌이는 와중에 《자본론》을 썼다. 1864~72년 마르크스는 국제노동자협회, 즉 제1인터내셔널의 주요 지도자 중 한 명이었다. 이 시기에 마르크스는 인터내셔널이 미국 남북전쟁에서는 노예제에 반대한 북부를, 아일랜드 독립 운동을, 1871년 파리 코뮌을 지지하도록 이끌었다.

《자본론》 내용에도 노동자들의 투쟁이 반영돼 있다. 마르크스는 엥겔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병에 걸리고 “진정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진척”을 보이기 어려워서 [애초 계획에는 없던] 후일 《자본론》 1권 10장이 되는 “노동일” 부분을 썼다고 설명했다. 이 장은 오늘날 읽어도 빅토리아 시대 자본가들의 무자비한 착취 방식이 얼마나 경악스러웠는지, 그리고 노동자들이 집단적 저항으로 자본가들을 물러서게 하고 법정최대 노동일 규정을 쟁취한 과정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를 느낄 수 있다.

《자본론》이 오늘날에도 유효한 이유를 먼 데서 찾을 필요 없다. 《자본론》은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정, 임금 인상 제약, 무리배 같은 사장들에 맞서 싸우는 오늘날의 세계를 다룬 책이기도 하다. 자본주의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한, 《자본론》도 계속 유효할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572호 / 번역 김준효



트럼프의 유엔 연설 북한 도발이 아니라 트럼프의 초강경이 진짜 문제다

김영익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9월 19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다시 한 번 자신의 “미국 우선” 노선을 전 세계에 천명했다. 그는 “내가 집권하는 한 다른 그 무엇보다 미국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며 동맹국들을 향해 한쪽에만 유리한(즉, 미국에는 불리한) 거래는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다고 했다.

많은 서방 지배자들이 유엔 총회에서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국제 질서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미국 대통령의 연설을 떨떠름하게 지켜봐야 했을 것이다.

트럼프는 또한 북한·이란·베네수엘라 등을 “사악한 소수의 불량국가”라고 지목하며 매우 공격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이 정권들은 공통점이 거의 없는데도 말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올바른 다수가 사악한 소수에 대적하지 않으면, 결국 악이 승리할 것이다.”

이런 주장은 2002년 부시가 이라크·이란·북한을 “악의 축”이라며 비난한 것과 비슷하다. 그중 이라크 후세인 정권은 2003년에 미군 침공으로 무너졌다. 그 일에서 나름의 교훈을 얻은 북한은 핵무기 개발로 치달았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란과 북한은 트럼프에 의해 “악”으로 규정됐다.

국제정치에서 이런 식의 선악 구분은 그 자체로 매우 위선적인 이중 잣대다. 예컨대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수백만 명의 아사, 수많은 사람들의 투옥, 고문 등에 책임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소수민족 로힝야족을 탄압하는 미얀마(버마) 국가 비판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다. 이 연설에 앞서 트럼프를 만난 방글라데시 총리는 트럼프가 로힝야족 문제에 눈감았다고 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버마 국



진정한 “악의 축”, 트럼프

가와 관계를 개선해 온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의 연설에서 두드러진 부분은 바로 북한을 향한 군사 행동 위협이었다.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미국과 동맹국들이 위협받는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

그는 일부 국가들이 세계를 위협하는 북한과 무역할 뿐 아니라 무장시켜 주고 금융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말했다. 핵무기와 미사일로 무장한 범죄자 무리를 지켜보고 싶지 않다고도 했다. 이것은 중국 등을 겨냥한 얘기다. 트럼프는 유엔 대북제재보다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트럼프의 연설에 앞서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니키 헤일리, 국무부 장관 틸

러스 등 트럼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잇달아 대북 군사 행동이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음을 강조했다.

“외교 옵션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결국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대북 이슈를 다루게 된다. ... 그렇게 되면 북한은 파괴될 것이다.”(니키 헤일리)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실패한다면 단 하나 남은 것은 군사 옵션이 될 것이다.”(틸러스)

서울

특히, 별명이 “미친개”인 국방부 장관 매티스가 서울을 위협에 빠뜨리지 않을 대북 군사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큰 피해를 입을까 봐 미국이 대북 군사 행동에 주저할 것이라고 ‘오판’

하지 말라는 얘기다. 그리고 조만간 한반도 인근에 미 항공모함이 배치된다.

트럼프 정부의 잇단 호전적 발언이 한반도가 당장 “화염과 분노”에 휩싸일 것임을 시사하는 건 아닐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북핵 문제에서 미국이 실패하지 않았고, 북한과 그 주변국들한테 여전히 상황을 통제할 능력과 의지가 있음을 보여 주려는 것 같다. 그래서 대북 군사 행동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이것이 단지 엽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결국 북한이 먼저 물러서라는 것이다. 아니면, 중국이 대북제재를 강화하라는 것이다.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면, 미국의 협박이 도리어 북한의 강한 반발을 부르

며 사태를 더 악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도 그럴 공산이 있다. 북한이 미국한테 보낼 “선물”은 아직 많이 남아 있을 것이다.

게다가 서울(한국)이 위험하지 않은 대북 군사 행동은 거의 불가능하다.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은 즉시(자칫 중국까지 휘말리는) 전면전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현재 언론에는 “위험하지 않은” 군사 행동으로 해상 봉쇄나 사이버공격 등이 거론된다. 최근 미국 재무부는 북한이 제재를 우회하려고 밀수를 자행한다고 폭로했고, 9월 미국이 제출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 초안에는 공해상에서 군사력을 동원한 선박 검색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이런 식의 군사 행동도 북한의 반발을 부르며 한반도 상황을 아주 불확실하게 만들 것이다.

물론 지금의 긴장 상황이 시간이 지나 일시적인 이완기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그만큼 판돈이 크게 걸려 있는, 즉 미국에게도 위험한 도박일 테니 말이다.

그러나 제국주의 갈등이 계속 악화하는 한, 한반도 긴장은 근본으로 해소되지 않고 금세 재발될 것이다. 수준이 더 악화된 형태로 말이다.

그때마다 미국 대통령이 ‘오판’하지 않으리라 기대할 수 있을까? 게다가 트럼프인데? 아니면 문재인이 외교력을 발휘하길 기대해야 할까? 지금 문재인은 사드 배치 등 트럼프에 협력하는 길을 선택하고, 핵잠수함 건조 등 우회적으로 핵무장을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말이다.

한반도 긴장의 원인인 제국주의에 맞서고 자본주의 이윤 체제를 마비시킬 유일한 사회 세력인 노동계급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것, 이것만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선의 길이다.

트럼프 방한 반대한다!

이런 와중에 11월 초 트럼프가 한국에 올 예정이다. 11월 10~11일 베트남 아펙(APEC)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한·중·일을 순방하려는 것이다.

진보·좌파는 모두 한반도 긴장의 주범인 트럼프의 방한에 반대해야 한다.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문재인은 대북제재와 군사 협력 강화에 합의했는데, 그런 결정이 이후 한반도 정세에 매우 부정적인 효과를 낳았다.

그 뒤 사드가 급속하게 배치되고 한미

FTA 문제가 불거진 것을 두고,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은 “정상회담 당시 무엇인가 미국과 다른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하고 지적했다. 외교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사인 만큼, 그의 의심에 근거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11월 한·미 정상회담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트럼프는 상당히 많은 청구서를 들고 서울에 올 것이다. 대북 압박 강화, (사드 구입까지 포함한) 미사일방어체계(MD) 참가 및 비용 분담, 미국산 무기 수입, 주한미군 방위비분

담금 증액,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 방안, 한미FTA 개정 등등.

문재인은 결국 트럼프의 요구에 별로 저항하지 않을 것이다. 그 자신이 미국과의 협력을 우선하기로 선택했으니 말이다. 비록 지지층을 의식해 대북 인도적 지원도 말하지만 말이다.

트럼프의 11월 방한은 한국인 다수에게 결코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화염과 분노” 운운하며 한반도를 위협하는 진정한 “악의 축”에게 노동계급의 분노를 보여 주자.

추천 책



제국주의론으로 본
**트럼프 등장 이후의
동아시아와 한반도**

김영익·김하영 외 지음, 책갈피, 288쪽, 13,000원